

데스크칼럼

김인수

사회부장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당선의 기쁨과 낙선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 역시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변화 속에서 치러진 초대 통합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수조 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책임지고 수만 명의 교육공무원을 이끌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였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비교해보자 인지도 경쟁이 앞섰고, 선거 막판에는 단일화와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판을 주도했다. 각종 의혹 제기과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은 미래 교육 청사진보다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과 해명을 더 자주 접해야 했다.

결국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교육의 미래를 논해야 할 선거가 정치적 공방에 가려지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구조적 한계 또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까.

미래교육을 위한 바른 길

한때 광주에는 '실력 광주'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교육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은 도시 경쟁력의 상징이었다. 물론 그 시절을 무조건 미화할 수는 없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획일적인 교육은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지난 세월 학생 인권과 평등, 민주적 학교문화를 강조해 온 교육 역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학교를 보다 민주적인 공간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우리 교육이 이른 소중한 진전이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실력과 인권, 학력과 평등을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가치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력을 강조하면 경쟁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인권을 말하면 학력 저하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진영 논리가 교육 현장 깊숙이 스며들면서 교육의 본질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하지만 실력과 인성, 평등과 경쟁, 돌봄과 학력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미래 교육이 함께 품어야 할 핵심 가치들이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교육을 완성할 수 없다. 서로 다른 가치를 조화롭게 연결하고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교육의 본질에 가깝다.

AI 시대를 맞아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AI와 함께 공부하고 교사들도 AI를 활용해 수업을 준비한다. 앞으로는 단순한 지식 암기만으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판단과 선택,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 교육의 목표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다움과 공동체성, 창의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교육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승자와 패자, 진보와 보수, 전교조와 비전교조라는 이분표를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다. 초대 통합교육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도 여기에 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의 목소리까지 품어내며 광주와 전남의 교육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력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줄길 바란다.

교육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도, 교육감도 결국은 시대와 함께 지나간다. 그러나 오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떨어진 학력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한 번 무너진 교육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교육의 본질을 향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향한 책임 있는 실천, 통합특별시 첫 교육감에게 주어진 진정한 과제를 잊지 말길 바란다.

기고

유성애

광주동부소방서 소방장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기관·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대리 결제 사기 또는 금품 갈취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이 2026년 3월 기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3~2025년) 소방기관·소방공무원 사칭 피해 건수는 총 1309건, 피해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수법은 점차 조직적이고 치밀해져 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나아가 문자 위조와 현장 방문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사칭범죄는 소방기관 직원을 가장해 업체에 전화를 걸어 '훈련용 물품이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기 의무 사항이다', '긴급 납품이 필요하다' 등의 말로 접근한다. 이후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하게 하거나 개인 계좌로 계약금·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다.

일부는 위조 공문서와 명함까지 사용해 실제 공공기관처럼 행세하며 피해를 속인다.

더 나아가 위조 직인과 서명을 활용한 가짜 공문 송부, 민생경제지원금과 연계된 소방 용품 구입비 지원 안내라

당신의 안전을 노리는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를

는 허위 전화,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한 확인 절차 위장, 현장 방문 시 가짜 명함 제시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다.

특히 '즉시 납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긴급성을 강조해 신속한 입금과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응할 시간을 빼앗는다.

광주 지역 2023년과 2024년에는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2025년에는 사칭 전화와 물품 구매 요구 등 사기 시도가 다수 발생했다.

당시에는 실제 금전적 피해를 이어지지 않았지만, 2026년 3월 북구 용봉동 한 고시원에서는 '질식 소화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 전화를 받고 이를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약 500만원의 계약금을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동구 일대 숙박업소 등에서도 안전 점검을 빙자한 소화기 구매 요구가 접수되면서 지역사회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40~60대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숙박업소, 음식점, 찜질점, 납품업체 등은 평소 공공기관과 연락하거나 안전점검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긴급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금과 거래를 유도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만으로 물품 구매나 대리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소방기관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인에게 알려 유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동부소방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확인 방법과 신고 요령 등 행동 중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주의하라'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이름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시민은 사칭 전화·문자에 주의하고 의심될 경우 반드시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성인뿐 아니라 학생, 청소년, 노년층,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세대의 계층이 함께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하다. 작은 확인과 신고가 큰 피해를 막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국적 억제 효과도 이끈다.

모든 시민은 범죄 예방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공동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눈과 귀가 열려 있을 때 범죄자는 설 자리를 잃고 사회는 더욱 안전해진다.

취재수첩

골목에서 묻는 통합의 의미

김은지

산업부 기자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최초의 행정통합 메가시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이끌 초대 지도부와 광역의회도 진용을 갖췄다. 서울에 준하는 위상과 320만 명의 인구,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 특례를 쥐게 된 만큼 지역 정·관가는 첨단산업 유치와 압도적 성장이라는 청사진을 연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발전 전략 이면의 서민 경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새로 출범할 통합정부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거창한 청사나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다. 당장 생계 위기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이다.

최근의 서민 경제 지표들은 지역 자영업계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외식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골목상권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세 업소는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기초 체력마저 소진되었다는 점이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최근 개편된 공공요금 체계까지 겹치며 고정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출로 숨통을 연명하던 서민들이 엔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 국면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이유다.

이것이 오는 7월 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면한 실질적인 성적표다. 초광역 행정통합이 가져올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도 장기적으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기업 유치나 낙수효과가 골목길 바닥까지 스며들기에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당장 매달 돌아오는 고정비와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게 수년 뒤의 점단도시 계획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새로운 통합특별시는 거대한 체급에 걸맞게 서민 경제의 실질적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한다. 특별법 통과로 확보한 행정·재정적 권한과 균형발전기금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과감하게 투입해야 할 때다.

행정 구역의 결합이 단순한 조직의 비대화나 거대담론의 독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320만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복합소방망의 개수나 화려한 외형적 지표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가계부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이끌어갈 이들이 증명해야 할 첫 번째 '지역 주도 성장'은 우리 동네 골목상권의 온기를 되살리는 일이다.

사설

지역 선거사범 크게 늘어...발본색원해야

6·3지방선거는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과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선수 요기베라의 명언처럼 '끝난 때가 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록 이 말이 경기나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긴 하지만...

광주·전남경찰은 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에 이들 사건을 모두 처리기로 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때보다 혼탁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지역 선거사범은 광주 133명, 전남 550명 등 모두 683명이다.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거사범(광주 52명·전남 249명) 301명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선거구 곳곳에서 박빙구도가 형성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문제는 경찰이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선거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3대 선거범죄 관련 선거사범의 경우 광주(69명)는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전남(361명)은 65.6%나 됐다. 여기에 후보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시작된다.

경찰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할 공표와 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선거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3대 선거범죄 관련 선거사범의 경우 광주(69명)는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전남(361명)은 65.6%나 됐다. 여기에 후보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시작된다.

경찰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할 공표와 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선거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3대 선거범죄 관련 선거사범의 경우 광주(69명)는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전남(361명)은 65.6%나 됐다. 여기에 후보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시작된다.

여기에 진위 판별이 쉽지 않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허위·가짜뉴스까지 가세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절실하다.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남 1호 장성데이터센터 속도 낸다

전남 제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가 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출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장성 데이터센터는 전남도, 장성군, 민간이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7번째 프로젝트 사업으로 AI, 클라우드 등 데이터 관련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가 한곳에 모여 있는 시설이다.

여기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정책펀드와 달리 대규모 지역 활성화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해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총 39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한 2028년 2월까지 수전용량 26MW급 데이터센터 1기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수전용량을 60MW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 AI 전진기지로 육성기로 했다.

이 데이터센터는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라 지역에 분산 구축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그동안 센터 건립을 위해 지대한 공을 들였다. 지난 2023년 업무협약 이후 투자사와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행정 지원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민간 투자자와 임차사 모집에 탄력이 붙었고 현재 씨제이(CJ) 올리브네트웍스, 현대차증권, 대우건설, 파인엔파트너스자산운용(주)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될 경우 빅테크 기업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내년 2월 초까지 8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지자체의 예산 조기 확보를 위해 '면제 트랙' 적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출자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장성 데이터 센터가 차질없이 추진돼 AI 전진기지로 거듭 나길 바란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nd advertising.